

‘국군 50만 vs 북한군 128만’ 절대약세 우려에

軍 “장비 등 종합적 수준 고려해야”

국방부 ‘2020 국방백서’

지난해 12월 기준 총 55.5만명
4년만에 육군 수 6.3만명 줄어

“유사시 즉각대응 병력 매우 중요”
일각서 예비전력 강화 목소리도

북한이 남한보다 72만5000여명의 군사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의 군사력 차이는 갈수록 벌어지지만 정부는 훈련수준, 보유장비 등을 감안할 경우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가 2일 공개한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군의 총병력은 55만5000여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대비 6만3000여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북한군은 ‘2018 국방백서’ 기준으로 2년간 병력은 동일했다. 북한군 총병력은 육·해·공군과 전략군을 포함해 총 128만여명 규모다. 같은기간 약 2년 동안 국군은 4만4000여명이 줄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국군은 50만명으로 감축된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병력감축으로 북한군과 병력 격차가 커지더라도, “남북한의 군사력을 실질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선 훈련수준과 보유 장비의 성능과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지상군 병력차 커져... 예비전력 등
숙련도 강화해야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해·공군 병력 규모는 2017년 이후 변동 없지만, 육군의 경우 2017년 48만3000여명에서 지난해 42만여명으로 줄었다. 최종적으로 36만5000여명까지 줄어들게 돼 지상군의 병력격차는 더 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4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5연장 방사포가 등장하고 있다.

/뉴스스

북한군의 경우 육군은 110만명이며 특수작전군이라 불리는 북한의 특수부대(육·해·공 포함)는 20만명 수준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질적인 개선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육군기준으로 복무기간이 18개월까지 짧아져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예비전력의 강화가 절실히 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찬우 특수작전연구회(LANSOC-K) 연구원은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군 당국이 정찰위성을 비롯한 첨단 무기 체계를 도입하더라도 유사시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병력지원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과학화 훈련 도입 등 교육훈련의 향상을 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몸으로 체감하는 실전적 훈련 없이는 교육훈련 수준이 게임에 머무를 것”이라고 말했다.

현역 및 예비군의 과학화 훈련 시스템은 점차 확충되고 있지만, 전시 부대가 즉각 증강설되는 절차훈련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실례로 유사시 각개 전투원에 지급되는 탄약분배 훈련의 경우 우리 군은 콘크리트 더미박스를 소산진지에 옮기고, 탄약카드로 개인에게 분배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외국군은 실제 훈련 조건을 충족하면서 탄약의 발사가 되지 않는 더

미탄으로 삽탄훈련을 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은 아직 이러한 훈련교보재의 확보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예비전력 장비·물자 심각... 北특작부 대에 치명적

동원전력의 즉응성 강화를 위해 2018년 4월 6일 육군동원전력사령부가 창설됐지만, 즉응성 있는 훈련교보재는 고사하고 편제장비마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하부대의 통신장비는 의명에 의해 투입되는 전방부대와 소통되지 않는 노후 통신장비인데다 동원대상이 되는 편제인원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 개인전투장구 및 장비물자도 노후한 상황이다.

20만명 규모의 북한군 특수부대가 후방지역으로 침투한다면, 이들을 제압해야 하는 지역방위사단 소속의 예비군 장비로는 실질적인 제압이 힘들 것이다.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의 홍희범 편집장은 “최근 북한군이 열병식을 통해 공개한 야간투시병 등 개인전투장비들이 중국제 저가제품이라 하더라도 후방지역 예비군과 지역방위사단에는 위협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알감자떡·버섯칩 등 농가소득 올린다

농진청, 가공상품 지원사업
농가 평균매출 15.7%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농산물 가공 제품을 만들어 소득을 올리는 농가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농가형 가공 상품 마케팅기술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가의 평균 매출액이 15.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8개 시·군 156개 농가가 참여했고, 코로나19 사태에도 참여 농가의 평균 매출액이 2019년 1억원에서 2020년 1억1600만원으로 늘었다.

강원 태백의 태백산채마을농업회사법인은 밀가루 대신 감자전분을 이용해 감자 안에 치즈를 넣어 만든 ‘감자치즈볼’과 쫀득한 감자떡 안에 부드러운 감자볼을 넣어 만든 ‘알감자떡’ 등을 개발·판매해 지난해 2억 2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년(2019) 매출액 1억 6000만 원보다 37% 증가한 액수다.

전남 강진의 믿음영농조합법인은 유기농으로 재배한 버섯을 원료로 지방 함량은 내리고 바삭함은 높이는 저온 진공 튀김 방식으로 튀긴 ‘버섯칩’ 등을 만들어 판매해 전년 매출액 8억 8600만원보다 13% 늘어난 1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경북 성주의 참샘영농조합법인은 과자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바닐라 또는 레몬을 참외로 바꿔 참외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참외구운과자’를 비롯해 ‘참외잼’, ‘참외청’ 등을 개발해 판매 중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24억원으로, 전년 매출액 22억원보다 9% 증가했다.

전북 장수의 한비준한과업체는 주로 인삼이나 도라지 등으로 만드는 정과를 사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특히 ‘사과정과’는 기존 정과의 딱딱하고 끈적한 식감을 개선해 부드럽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지난해 매출액은 4억2000만원으로, 전년 매출액 4억원보다 5% 늘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패트롤 현장점검 시행 고용부-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재 사고 사망 예방을 위해 ‘패트롤 현장점검’을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패트롤 현장점검은 추락이나 끼임 등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근절하기 위해 공단이 중소사업장을 불시 방문해 3대 안전조치(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사업이다. 추락과 끼임 사고의 사망 비중은 작년 기준 48.3%에 달한다.

올해는 작년보다 점검 횟수를 늘리고 패트롤 전용차량을 404대로 확대하는 등 사업을 보다 강화하고,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건설업은 120억원 미만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특히 사고사망이 증가하는 50억원 미만 현장의 핵심 고위험작업에 집중키로 했다. 제조업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히 컨베이어 등 10대 위험기계 기구 보유 사업장을 점검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규정 주호영 “기본철학 잘못돼”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정부 비난

4·7 재보선 앞두고 정권심판론

“주택 공급 철저히 막는 가운데
수요 억제... 규제감옥에 가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부동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북한 원자력발전소 설치 의혹 등 정부 현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4·7 재보궐선거에 앞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모습이다.

주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것’으로 규정하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의 기본 철학과 기조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시장경제 원리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욕구’ 무시, ‘국민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등을 지적하며 “주택의 공급을 철저히 막는 가운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국민들을 사상 유례없는 규제 감옥 속에 가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세계 각국과 비교해 늦어지는 점을 지적한 뒤 “작년부터 진작 전문가들과 우리 국민의힘의 제언에 귀 기울였다면 이렇게까지 뒤처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전문가와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이상의 시행착오와 실수가 없길 바랄 뿐”이라고 꼬집었다.

주원내대표는 또 “이 정권 사람들이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호도하고 있다. 사실 왜곡 제발 그만하라”며 현 정부 대북 정책을 겨냥한 비판도 했다. 최근 북한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지적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해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 ‘색깔론’, ‘북풍 몰이’ 등으로 규정하며 비판하는 데 대해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정상회담 추진 위원장이 누구였나? 2018년 지방선거를 불과 하루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쇼를 주선했던 사람은 누구였나”며 “바로 이런 게 북풍공작 아니냐. 이 정권은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공작으로 뒤집어씌운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비판도 이어갔다. 주원내대표는 정부 활성화 및 기존 도심의 고밀도·고층화 개발 ▲법률 상한보다 낮은 용적률 기준 상향 및 안전진단 기준 조정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한 공급물량 대폭 확대 ▲양도소득세 및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 등 종합적인 세 부담 완화 정책 마련을 약속했다.

주원내대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

한 시대 유물 같은 정치”, ‘색깔론’, ‘북풍 몰이’ 등으로 규정하며 비판하는 데 대해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정상회담 추진 위원장이 누구였나? 2018년 지방선거를 불과 하루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쇼를 주선했던 사람은 누구였나”며 “바로 이런 게 북풍공작 아니냐. 이 정권은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공작으로 뒤집어씌운다”고 반박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이차전지 소재부품 기업에 230억 투입

산업부, 2023년 시험평가센터 구축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대형 이차전지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까지 총 230억원을 투입해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에서는 이차전지 핵심 소재와 주요 부품에 대한 분석뿐 아니라 실제 전기차에 사용되는 수준의 중대형 배터리 셀 성능평가까지 받을 수 있다. 평가결과 피드백, 오류분석 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도록 일괄 지원한다. 또 셀 제조라인 및 시험평가 장비 등을 활용한 실습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이차전지 전문인력양성 기능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지금까지 국내에는 휴대전화 등에 쓰이는 소형 전지를 위한 시험평가 인프라만 있을 뿐, 전기차·ESS(에너지저장장치) 등에 쓰이는 중대형 전지 테스트를 위한 전문적 제조·평가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배터리 셀 생산라인이 없는 소재·부품 기업들은 전지생산업체에 성능평가를 의뢰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 커졌다.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가 구축되면 소재부품을 개발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은 성능평가 비용과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개발 초기단계부터 배터리 셀에 적용해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